

2019년 「교육부 청렴문화운동」 추진 계획

2019. 2.



교육부

[감사관실]

【 목 차 】

I . 추진 배경	1
II .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	1
III . 추진 방향	4
IV . 중점 추진과제	5
1. 청렴생태계 조성	5
2. 부패위험 제거·개선	8
3. 청렴문화 정착	14
4. 청렴문화 저변 확산	17
【붙임】 2019년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추진 일정(안)	19

I. 추진 배경

- 청렴문화운동 등 기관차원의 부패 예방 활동은 우수*한 편이나, 기관 청렴도**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
* 부패방지 시책평가 : '15(3등급) → '16(2등급) → '17(2등급) → '18(2등급)

** 청렴도 평가 : '15(5등급) → '16(5등급) → '17(4등급) → '18(4등급)

- 정책고객,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청렴도 차이* 극복 등 일반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'청렴 실천' 문화 확산

* 내부청렴도 평가(3등급, 7.9점) VS 정책고객평가(5등급, 6.6점)

※ '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(권익위, '18) : 국민(53.4%), 전문가(49.0%) > 공무원(19.1%)

II.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

【그간의 성과】

- 여러가지 평가결과(청렴도·부패방지 시책평가, 부패위험성 진단)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흡·개선 필요사항은 집중 관리하는 체제 마련

- 소속기관과 함께하는 '교육부 청렴문화운동' 추진 방안 수립('16년부터 시행)

※ '16년 이후 종합청렴도는 꾸준히 상승, 시책평가도 3년 연속(2등급) 우수기관으로 선정



- 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전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

- 부총리 명의 청렴 서한문 발송, 청탁금지법·행동강령 관련 전직원 및 직급별 맞춤형* 청렴교육 실시('17년 2회 → '18년 10회) 등

* 직원 대상 직장교육(연 2회), 과·팀장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집합교육(2시간) 실시 등

-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全社的 동참 분위기 조성
 - 청렴문화운동 추진기획단(차관) 등 상시협의체* 구성, 내부부패 행위 신고시스템 개선(실명→익명), 내부 갑질행위 신고 코너 운영
 - * 교육부-소속기관 청렴담당과장 협의체, 주무사무관 참여 청렴 점검 협의회 등
 - 전직원과 함께하는 청렴이해 퀴즈대회 및 청렴 실천사례 수기·표어 공모전 개최, 부서별 청렴 실천 참여 실적을 부서평가 지표에 반영

□ 부패 예방을 위한 '징계양정기준' 등 규정 정비

- 금품·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강화*, 외부강의등 관리 철저 및 위반자 엄정 처리 근거 마련 등** 자체 행동강령 개정
 - * (기존) 100만원 미만 경징계 → (개정) 100만원 미만 중징계
 - ** '직무수행 목적외 정보유출 금지', '신고·제보자 정보 보호 의무', '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' 등 「청탁금지법」 시행 이후 4회 개정
 - ※ 직·간접 부패경험 : 정책고객 9.71점, 외부 8.84점<타기관 평균(각각 8.56점, 8.72점)보다 높은 수준>

□ 고위공직자 청렴도 등 조직전반의 부패위험성 자체 진단

-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* 평가('11년부터 시행) 및 조직·업무환경 부패위험도** 진단('17년부터 시행)
 - * 개인별 청렴도 : '15(9.62점) → '16(9.59점) → '17(9.69점) → '18(9.76점)
 - ** 조직 환경 : '17(5.66점) → '18(5.70점) / 업무 환경 : '17(5.46점) → '18(5.29점)

【문제점】

□ 낮은 수준의 반부패·청렴 의지* 및 부패 노출 우려가 높은 조직·업무 환경**

- * 정책고객이 평가한 우리부의 반부패·청렴 의지 수준 : 5.99점(타기관 평균 7.60점)
- ** 학연·지연 등 연고 중심의 업무처리 관행 타파 수준 : 4.87점(타기관 평균 5.39점)

집중
관리
개선
필요
사항

구성원의 청렴활동 참여 확대 등 반부패·청렴 생태계 조성

- ❖ 청렴서한문, 추진기획단, 청렴협의체(네트워크) 등 청렴 거버넌스 구축·운영
- ❖ 청렴소식지 제작·보급, 집중 청렴주간 확대(연1회 → 연2회)
- ❖ 부당한 업무지시, 연고중심 문화 등 조직환경에 대한 반부패 지수 진단 지속 실시

□ 대학, 산하기관, 정책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는 우리부 업무처리 방식* 및 투명성**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

* 업무처리 시 갑질 관행 근절 수준 : 정책고객평가 6.42점(타기관 평균 7.91점)

** 업무처리 기준·절차 공개 정도 : 정책고객평가 5.53점(타기관 평균 7.48점)

집중
관리
·
개선
필요
사항

대학 등 관리·감독 기관과의 수평적 문화 조성

- ❖ 대학·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대상 '청렴소통교육'을 통해 인식 개선
- ❖ 정책고객별 맞춤형 업무 매뉴얼 제공 등 업무처리 기준·절차 적극 공개
- ❖ 갑질관행 근절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개정 추진

□ 부패행위·공익 신고자 정보 유출 사안발생 및 재취업 공직자* 등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에 취약한 업무환경**

*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및 영향력 차단 수준 : 정책고객평가 4.94점(타기관 평균 7.44점)

**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배제 수준 : 업무환경진단 5.89점(타기관 평균 6.10점)

특정인에 대한 특혜·청탁 배척 정도 : 정책고객평가 6.47점(타기관 평균 8.29점)

집중
관리
·
개선
필요
사항

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및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차단

- ❖ 공익·부패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
- ❖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기간 및 대상 확대 검토 추진(교육부-인사혁신처 협업)
- ❖ 진행 중인 민원, 감사, 인·허가 및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

□ 부패통제* 및 비위행위자 처벌**이 미온적이라는 외부 시각

* 특정인에 대한 특혜 배척 정도 : 정책고객평가 6.47점(타기관 평균 7.95점)

** 부패행위 적발·처벌의 적절성 : 정책고객평가 5.77점 VS 내부평가 7.34점

집중
관리
·
개선
필요
사항

행동강령 이행점검, 청렴교육 등 부패 예방 시스템 운영 강화

- ❖ 외부강의 실태 및 공직기강 점검,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

우리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위행위자 엄중 처벌

- ❖ 갑질신고센터, 내부부패행위 신문고 등 자체 신고시스템 구축 운영
- ❖ 부정청탁, 금품·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자 비위사례 탑재 전파로 경각심 제고

취약·저조 분야 집중 관리·개선, 청렴문화운동을 조직문화로 안착

Ⅲ. 추진 방향

비전

청렴도 제고 및 대국민 신뢰 회복

목표

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부

중점
추진
분야
및
과제

1

청렴 생태계
조성

- 1 청렴정책 참여 확대
- 2 청렴 거버넌스 운영
- 3 청렴 리더십 강화 및 조직환경 진단

2

부패위험
제거·개선

- 1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
- 2 부패관행 근원적 차단
- 3 행동강령 제도 정비 및 이행 정착
- 4 부패행위 처벌·관리 강화

3

청렴문화
정착

- 1 청탁금지제도 운영
- 2 반부패·청렴교육 내실화
- 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

4

청렴문화
저변 확산

- 1 청렴 실천사례 발굴·확산
- 2 청렴활동 홍보 및 대외 소통 강화

IV. 중점 추진과제

1 청렴 생태계 조성

1-1 청렴정책 참여 확대

① 청렴서약 및 청렴서한문 발송

- 본부 및 소속기관 신규·승진 직원 대상 청렴서약서 의무 징구*

* (청탁금지법 제19조)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징구의무

- 부총리 명의 청렴서한문 발송*(2회)으로 교육부 이미지 쇄신

② 청렴문화운동 추진기획단 등 협업 추진체제 확립

- 술선수범 차원에서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주요 간부가 참여하는 청렴문화운동 추진기획단* 지속 운영(연 2회)

* 차관, 3실장, 소속기관장, 감사관, 대변인, 운영지원과장

- 실무적으로는 교육부-소속기관 협의체(청렴담당과장), 반부패·청렴 추진 TF(분기별, 감사관실) 등 청렴 상시협의회 운영(반기별)

※ 기타 청렴협의회 : 실·국 주무 서기(사무)관 등 청렴협의회(수시)

③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등

-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(9개*)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

- 시책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(책임경영 지표)에 연계시켜 청렴 의식 확산

* 치과병원 4개(강릉원주대, 경북대, 부산대, 서울대), 국가평생교육진흥원, 동북아역사재단, 한국고전번역원, 한국사학진흥재단, 한국학중앙연구원

※ 시책평가 대상 9개 기관이외 산하 공공기관은 권익위에서 직접 평가

○ 국립대학병원 리베이트 수수 및 예약편의 제공 등 행태 근절

- 대학병원 기획·사무처장 등 주요보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 예방 및 인식 개선

④ 청렴 실천·참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

○ 청렴문화 확산 등 부서별 청렴담당관 활동실적 및 자체 청렴교육 참여 실적을 상시학습으로 인정

※ '18년 실적 : 54개 부서 청렴담당관 지정, 상시학습 인정자(누계 473명)

○ 청렴·반부패 분야를 부서평가 가감점 지표로 운영함으로써 청렴문화운동 동참분위기 확산

< 부서평가 가감점 지표(안) >

평가분야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
청렴문화 확산	청렴교육 참여	▶ 청렴교육 이수자 비율(3시간 이수인원/현원) ▶ 청렴이해 퀴즈대회 참여도(참여인원/현원)	20
	부서청렴 실천	▶ 청렴문화운동 코너 사례 탑재 건수 ▶ 집중 청렴주간 참여(공모전 등) 실적 ▶ 실국장과 직원간 소통간담회 운영 실적(가점) ▶ 부서별 청렴문화운동 실적 제출(가점) ▶ 외부강의등 처분 결과(감점)	20
	반부패·청렴 정책 이행	▶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 개선 과제 추진 ▶ 반부패정책협의회(생활적폐)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단위과제 이행 ▶ 업무추진 매뉴얼 및 기본 계획 공개 건수	20

○ 청백리공무원, 청렴정책 참여*,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저변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 및 표창(하반기)

* 청탁금지법·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, 부서청렴담당관 활동, 제도개선과제 이행,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등

○ 청렴업무 담당자 인사 가점* 및 수당 지급**

* 「교육부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」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(월 0.04점) 부여

** 「교육부 인사운영규정」 제21조에 따라 청렴업무를 전문직위(중요직급) 지정

① 청렴옴부즈만 운영

- 정기적(분기)인 청렴옴부즈만* 운영을 통해 '청렴문화운동 추진상황'에 대한 자문과 개선 의견 등을 반부패·청렴정책에 적극 반영

* 법조계-회계사-건축사-교육계 등 5명

- 청렴옴부즈만 활동내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*(시책평가 지표)

* 교육부 홈페이지- 부패공익신고 - 청렴옴부즈만민원 - 게시판

② 청렴협의체 구성·운영

- 외부시각 이해 및 소통에 기초한 교육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단체, 산하기관 등이 함께하는 청렴협의체 운영*(반기)

* 「청렴문화운동 네트워크」 민간단체, 공공기관, 교육부 3그룹 참여

- 산하기관-교육부가 함께하는 이해관계자·일반국민 대상 반부패·청렴 캠페인* 활동 전개

* '청탁금지법 바로알기', '부패인식 개선'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

※ '18년 실적 : 전국 대학 연구처장 대상 반부패·청렴부스 운영, 일반시민 대상 청렴 실천 홍보 등

③ 부서별 청렴담당관제 운영

- 부서내 청렴소통 및 청렴 실천사례 공유* 등 전직원의 청렴문화운동 동참 및 확산을 위한 부서별 청렴담당관 지정·운영

* 내부망-청렴문화운동-부서 청렴 실천사례/청백리 칭찬사례

- 자체 청렴교육 실시, 청렴문화운동 추진 회의 개최 등 부서 청렴담당관 활동(멘토) 실적을 상시학습(청렴교육)으로 인정

※ 부서 청렴담당관 활동 결과(내용+사진) 게시판 탑재 → 최대 20시간까지 인정

1-3 청렴 리더십 강화 및 조직환경 진단

① 고위간부 청렴 리더십 강화

- '위로부터 청렴 실천' 등 청렴 리더십 제고를 위해 과·팀장 이상 고위 공직자 대상 개인별 청렴도 진단 지속 추진(10월)
- 인사·성과평가(개인평가)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(운영지원과, 혁신행정담당관)에 결과 통보 및 개인별 결과를 진단대상자에 제공

②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·환류

- 향응·편의 수수, 부당한 업무지시, 연고중심 문화 등 조직환경* 부패 위험성 진단(6월-자체 설문, 10월-외부 용역)
 - * (기존)조직+업무환경, 본부직원 대상 → (개선)조직환경 전반, 본부+소속기관 직원 대상
 - ※ 진단항목(안) : ①의사결정의 공정성, ②조직의 개방성, ③퇴직자 재취업 제한, ④적정한 권한의 분배 정도, ⑤학연, 지연 등 연고주의 타파 정도, ⑥이해관계자의 영향력·청탁 배척 등
-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분석 및 전직원 대상 보고회 개최

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전직원과 공유하고, 부패취약·저조 분야*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청렴실천의지 다짐

* 낮은 수준의 반부패·청렴 의지(5.99점), 업무처리 기준·절차 공개 미진 (5.53점) 등

2 부패위험 제거·개선

2-1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

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

- 공무원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방안*,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** 등 제도개선 권고과제 적극 이행(권익위 추후 통보 예정)

* 「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」 및 각급 기관의 관련규정에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및 징계기준 마련 등 2개 세부과제

**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, 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, 연구용역 중복·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등 8개 세부과제

②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선정 이행

○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등 법·제도(법령 등)·시스템상 부패유발* 요인을 자발적으로 발굴·개선

- 개선 담당자 표창 수여 및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

* 부패취약분야 : ①국가재정(보조금, 연구비 등) 누수 부패, ②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, ③준공공영역(공익법인 등)의 부패친화적 관행, ④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등

2-② 부패관행 근원적 차단

① 산하기관 지원·관리감독 분야 부패관행 근절

○ 대학, 유관단체로부터 금품·향응·편의 수수 근절

- 업무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지속 추진

- 대학·유관단체에 금품·향응·편의 수수 근절 안내 및 협조 요청

○ 소속기관·유관단체 등과의 수평적 문화 조성

- 불필요한 자료요구 근절 및 간담회 경비 ‘각자내기’ 실천, 기념·홍보용품 받지 않기 등 수평·협력·동반자 관계로 전환

② 재정지원사업 업무처리 기준·절차 정비

○ 업무처리 기준·절차 명확화 및 적극 안내로 현장 오해 불식, 적극적인 업무 처리 실적을 부서평가(부서 청렴 실천사례) 지표에 반영

※ 정책고객별 맞춤형 업무 매뉴얼 제공 등 사전정보 공표* 실적을 부서평가 지표(청렴업무 실적)에 반영중

* 외부망(교육부 홈페이지) : 정보공개 - 사전정보공표

- 의견수렴 결과 및 중요 변경사항, 현장 질의·답변사항 등 공문
안내 및 외부망(홈페이지) 공개

- 사업기본계획에 교육부 퇴직공무원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, 특혜
배제내용, 위원회 운영 투명성 내용 포함

※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('16.1.26. 대학재정과) 평가위원 제외대상 명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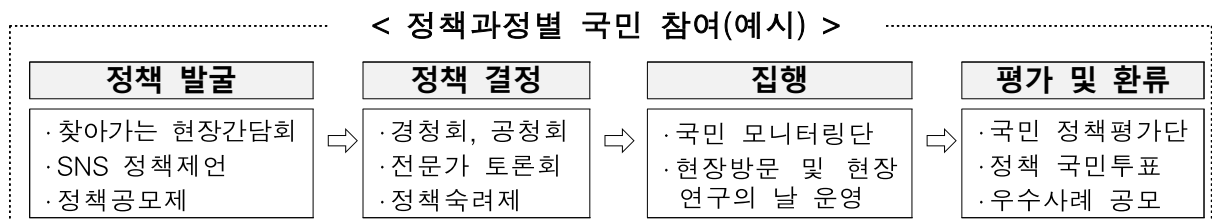
- 사업설명회 시 청탁금지 내용 포함 및 부정청탁시 선정 취소 등
강력하게 메시지 전달

③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

- 합리적·객관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

- 정책의 발굴부터, 결정, 집행,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이
참여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 및 투명성 제고

※ 정책과정별 국민 참여 소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성과평가에 반영



- 수평적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*시 공정한 직무수행 등 청렴
내용 포함(실적은 부서평가 지표에 반영)

* 부서간 소통 노력을 성과평가에 반영, '국별·직급별 소통의 날' 운영, 공동 업무 진행
부서 간 소통 채널 마련 등

- 법인카드 사용 실태 등 예산집행 관련 투명성 확보

- '예산집행 바로알기' 코너(내부망) 지속 운영 및 실·국별 법인카드
사용 실태 모니터링 강화(반기별)

- 업무추진비 집행세부지침 안내 및 위법·부당사례 공유 등

○ 인사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

- 퇴직 예정자 현황(향후 10년간), 재외한국교육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 직위 등 공개(연간, 반기별)로 인사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
- 승진심사 결과 및 5급 승진 역량평가 결과(기획력 및 면접 평가 순위) 공개 등* 인사운영 공개 및 투명성 확보

* 희망 전보내신제 반영, 인사교류 및 타 기관 파견직위 희망자 공개모집 등

- 직원 누구나 언제든지 인사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(위키 맞춤형정보 시스템) 및 인사상담실(513호) 운영

④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

- 퇴직공직자 부실 사립대학 총장 취업제한 기간 확대(3년→6년) 등을 통해 사립대학과의 유착 가능성 차단*

* 총장 취업제한기간 확대, 취업심사 강화,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공정성 검증 강화

-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·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하고, 사립 대학 무보직 교원으로서의 취업도 제한

※ 현재 취업제한 대상은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 /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 협의('19)

⑤ 사례 공유·전파로 경각심 고취 등 부패 사전 차단

-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 수시 안내

- 청탁금지법 Q&A, 행동강령 위반사례 수시 안내*로 비위 사전 차단

* 외부망: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/ 내부망: 청탁금지법 자료실, 행동강령 자료실 등

- 청렴 솔선수범 직원 등을 청렴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청렴교육자료 및 사례 등 신속 전파

○ 찾아가는 청렴소통간담회 및 청렴소통교육 실시

- 격무 및 현안업무 소관 부서*로 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소통간담회 실시(4회)

* ①국립대학 지원 및 관리, ②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, ③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및 취소, ④교원소청심사, ⑤계약 및 관리 분야 등

- 업무담당자·이해관계자 대상 '청렴소통교육'을 지원*하여 부패 예방 및 인식 개선

* 업무담당부서 → 반부패청렴담당관실로 청렴교육 요청 →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소통교육 실시

※ '18년 실적 : 국립대학교병원 감사담당(30명) 대상 청렴교육 등 8회 실시(725명)

2-3 행동강령 제도 정비 및 이행 정착

① 「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

-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,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금지 등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 사항 반영(상반기)

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안) 주요 내용 ＞	
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	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금지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·허가 담당공무원의 접수 지연 등 부당 행위 ▶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·요구 행위 ▶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관련 개인·단체 부당행위 전가·지연 ▶ 소속·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 및 비용·인력 부담 행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감기관에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예산 목적·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 제공 요구 등 ▶ 감독기관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요구받은 담당공무원은 이행 거부 및 재차 요구 시 신고 의무화 ▶ 부당한 요구 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

② 외부강의등 행동강령 이행 정착

- 외부강의등 실태 점검* 지속 추진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 엄격 적용(반기)

* 허위 신고 및 미신고, 사후신고 지연, 여비 등 부당수령 등

- 외부강의 신고 시 요청기관 공문서 첨부 의무화, 사전신고 원칙 등 외부강의 관련 유의점을 담은 리플릿 자료 제작·보급(1회)
-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(명절 등) 시·도교육청, 대학,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
- 금품수수행위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집중점검(연 6회 이상)

2-4 부패행위 처벌·관리 강화

①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부패 사전 예방

- 본부 자체감사를 실시(2회)*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, 제도 개선으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부패행위 사전 차단

* '19년 상반기-학생지원국, 하반기-국제협력관

※ 우수사례('18년) :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 개선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 절감

②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

- 금품·향응수수 등 우리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패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 엄격 적용
- 공익·부패행위 제보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 관리 철저, 위법 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

※ 진행 중인 인사·감사·민원 관련 정보, 발표 전 정책자료 등은 유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(「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 '18.10.5.)

3-1 청탁금지제도 운영

①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

○ 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

- 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상담 등 운영

※ 외부망-청탁금지법 알아보기-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/자료실/Q&A

※ 내부망-청렴문화운동-청탁금지법 자료실/갑질 사례 및 신고

○ '청렴 소통상담실' 설치 및 '청렴고충담당관' 지정·운영

- 감사관실 내 소회의실을 청렴 소통상담실로 활용

※ 청렴고충담당관(공업사무관 정달희 dallj00@mail.go.kr, ☎044-203-6086)

② 청렴이해 퀴즈대회 실시

○ 구성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퀴즈대회
지속 추진(연 2회, 참여실적은 부서평가 지표에 반영)

※ 퀴즈대회 참여 실적 등 우수부서 선정·포상

③ 청렴소식지 및 청렴 실천 자료 제작·보급

○ 전직원, 정책고객 및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'청렴소식通'을 제작·
보급(2회)하여 우리부 청렴정책 이해 및 부패 인식 제고

※ 청렴소식通 구성(안) : ①청탁금지법 핵심내용, ②청렴도·부패위험성 진단 결과, ③집중
청렴주간활동 등 청렴 실천사례, ④청렴문구 등

○ 교육부 '반부패·청렴 화면 보호기' 제작·보급(상반기)

※ 화면보호기 구성(안) : ①갑질관행 근절, ②청탁 및 금품 거절, ②건전한 손님맞이문화(3·5·5),
④외부강의 신고 유의점, ⑤신고·제보자 정보보호 등

3-2

반부패·청렴교육 내실화

① 반부패·청렴교육 강화

- 청렴강사 등을 활용한 청렴관련 직장교육 등 실시(연 2회 이상*)

* 「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4조 제1항 : 매년 2회 이상 교육 실시('18.10.5. 개정)

- 간부 등 전직원 대상 맞춤형 반부패·청렴교육 확대 운영(8회 이상)

<맞춤형 반부패·청렴교육>

<맞춤형 반부패·정령교육>			
구분	청탁금지법	행동강령	공익신고자 등 보호
교육 내용	<div>▶ 금품등 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</div> <div>▶ 사안별 대응 및 신고 절차 등</div>	<div>▶ 직무수행 목적외 정보 제공·유출 금지</div> <div>▶ 부패행위 제보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 보호 의무 등</div> <div>▶ 외부강의 신고 및 이해관계자와의 접견 원칙</div> <div>▶ 이해충돌 방지, 갑질,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 등</div>	<div>▶ 공익신고 대상법률* 및 처리유의점 등</div> <div>*자격기본법, 학교보건법, 학교 급식법, 유아교육법, 학교폭력 예방법</div> <div>▶ 민원인의 정보 보호 의무 등</div>
대상	①전직원, ②간부, ③신규 임용·전입자(파견 포함), ④승진자, ⑤부서별 민원처리담당자, ⑥공익신고대상법률 담당자 등		
※ 청렴도 결과 관련 직장교육(2월) → 간부교육(5월) → 직장교육(7월) → 실국별교육(9~10월)			

- 신규·승진·전입자 교육을 포함한 연수기간 2주 이상 장기교육과정에 청렴교육 최소 이수시간 확보(4시간 이상, 중앙교육연수원 등)

※ '부패상황 자각하기' 등 청렴교육연수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사이버 청렴교육 콘텐츠 수시 안내

매 교육시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**전직원과 공유**하고, **부패취약·저조 분야***에 대한 **통렬한 반성**과 함께 **청렴실천의지** 다짐

* 낮은 수준의 반부패·청렴 의지(5.99점), 업무처리 기준·절차 공개 미진 (5.53점) 등

② 반부패·청렴교육 참여 확대

- 신규 임용자 및 전직원의 청렴관련 직장교육 참석 의무화*(연 1회 이상)

* 「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4조 제2항 : 매년 1회 이상 교육 참석('18.10.5. 개정)

- 연간 고위공무원 2시간(집합*) 이상, 직원(과·팀장 포함)** 3시간 이상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승진·성과평가에 반영

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내실화

-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·처리, 자체 지침* 개정

* 「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

- 교육부 공익신고 대상업무* 부서 담당자 교육 및 홍보실적 점검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확보(4월, 10월)

* 자격기본법, 학교보건법, 학교급식법, 유아교육법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- 권익위 연계 공익신고센터* 운영 및 제공 홍보물을 기관지 및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(4가지** 이상 방법 활용)

* 외부망 : 국민참여·민원-부패공익신고-공인신고센터

** 온라인 매체, 포스터·리플릿 배포, 공익신고 상시 배너 연계, 기관지 홍보 등

② 부패신고 등 신고시스템 활성화

- 교육부 및 소속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모니터링 등 행태근절을 위해 신고시스템* 구축·운영

* ①내부부패행위등 신문고(익명), 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, ③갑질신고센터(익명) 등

- 부정청탁, 금품·향응수수, 편의제공, 직권남용, 예산 편법집행 등 부패 행위자의 비위사례 대외 공표(반기)*로 부패 경각심 제고

* 외부망 : 정보공개-감사정보

-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홈페이지 배너 상시 설치·연계

③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

- 「비위면직(파면·해임)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비위면직(파면·해임) 시 관련 시스템에 등록 및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

※ 각급 기관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임용 前 비위면직 여부 조회 요청 및 회신 실시

④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

- 기관별 내부인사·채용 관련 규정 개정 등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안내 및 이행현황 점검
- 채용 등 인사업무 담당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(시책평가 지표)

4

청렴문화 저변 확산

4-1

청렴 실천사례 발굴·확산

①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등

- '18년 교육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(1개월 이상), 시책과제 효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(하반기)

② 청렴 파트너 기관 매칭

- 청렴 파트너 기관 매칭을 통한 타 부처 모범사례 공유(기관 간 실무자급 업무회의 4회 이상)

※ '18년 실적 : 문화체육관광부-국가보훈처-고용노동부-산업통상자원부(4회, 11건 공유)

③ 청렴 실천사례 발굴 공유·전파

- 청렴 실천사례* 발굴 및 직원 칭찬 릴레이를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(실적은 부서평가 지표에 반영)

* 간담회 경비 각자내기, 기념·홍보물품 받지 않기, 업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받지 않기 등

※ 외부망-국민참여·민원-교육부 청백리 칭찬방 / 내부망-청렴문화운동-부서 청렴 실천사례

- 청렴표어·수기대회 등 전직원과 함께하는 '집중 청렴주간'* 운영

* 상반기: 청렴표어대회, 외부강의 점검('19.5.) → 하반기: 청렴수기대회, 맞춤형 청렴교육('19.9.)

① 청렴문화운동 홍보 강화

-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·변화사례 등 청렴문화운동 관련 교육부 청렴 우수사례 적극 홍보

- '청렴소식通', '청렴거름망*' 등 청렴홍보영상 제작·전파

* 권익위 제작 영상을 '19년 반부패·청렴정책에 맞게 문구·음성 수정·변경

② 정책고객 DB를 활용한 부서 업무별 맞춤형 홍보

- 청렴도 측정 대상(업무) 부서 홍보자료 제공 → 디지털소통팀 적극 홍보

※ 정책고객서비스(PCRM) 활용 : 청렴서한문, 홍보영상, 청렴소식通, 업무별 정책자료 등

③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

- 정책고객 심층면접, 전문가 간담회, 시·도교육청 협의회,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교육부 청렴 이미지 제고

※ 세미나, 공청회, 캠페인, 지역별 설명회, 오피니언 리더들의 언론기고 등 다양한 채널 활용

- 교육분야 부패행위 등 공익신고 창구의 일원화*를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

※ 유치원 고충·비리 신고, 사학혁신 제안·비리 신고, 성희롱·성폭력 제보 등

→ 가칭 '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'로 통합 운영

과제명	시기	주관부서	협업부서
1. 청렴 생태계 조성			
1-1 청렴정책 참여 확대			
1-1-1 청렴서약 및 청렴서한문(2회) 발송	수시 2월, 9월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 디지털소통팀
1-1-2 청렴문화추진기획단(2회) 등 협업 추진체제 확립	2월, 10월 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1-1-3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등	3월 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산하 공공기관
1-1-4 청렴 실천·참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	연중 4분기	반부패청렴담당관	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
1-2 청렴 거버넌스 운영			
1-2-1 청렴옴부즈만 운영(4회 이상)	분기	반부패청렴담당관	-
1-2-2 청렴협의체 구성·운영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-
1-2-3 부서별 청렴담당관제 운영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1-3 청렴 리더십 강화 및 조직환경 진단			
1-3-1 고위간부 청렴 리더십 강화	2월, 10월 '19년 1월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 소속기관
1-3-2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진단·환류	6월, 10월 '19년 1월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 소속기관
2. 부패위험 제거·개선			
2-1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			
2-1-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해당부서
2-1-2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선정 이행	연중 10월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2-2 부패관행 근원적 차단			
2-2-1 산하기관 지원·관리감독 분야 부패관행 근절			
가. 대학, 유관단체로부터 금품·향응 편의 수수 근절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나. 소속기관·유관단체 등과의 수평적 문화 조성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2-2-2 재정지원사업 업무처리 기준·절차 정비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해당부서
2-2-3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			
가. 합리적·객관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	연중	혁신행정담당관	전부서 반부패청렴담당관
나. 법인카드 사용 실태 등 예산집행 관련 투명성 확보	반기	운영지원과	반부패청렴담당관
다. 인사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	연중	운영지원과	반부패청렴담당관
2-2-4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	연중	운영지원과	인사혁신처

과제명	시기	주관부서	협업부서
2-2-⑤ 사례 공유·전파로 경각심 고취 등 부패 사전 차단			
가.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 수시 안내	수시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나. 찾아가는 청렴소통간담회 및 청렴소통교육 실시	수시	반부패청렴담당관	해당부서
2-3 행동강령 제도 정비 및 이행 정착			
2-3-①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-
2-3-② 외부강의등 행동강령 이행 정착	반기 수시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, 소속기관
2-4 부패행위 처벌·관리 강화			
2-4-①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부패 사전 예방	연중	감사총괄담당관	반부패청렴담당관
2-4-②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운영지원과
3. 청렴문화 정착			
3-1 청탁금지제도 운영			
3-1-①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-
3-1-② 청렴이해 퀴즈대회 실시	5, 9월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3-1-② 청렴소식지 및 청렴 실천 자료 제작·보급			
가. 청렴소식지 제작·보급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 디지털소통팀
나. 반부패·청렴 화면 보호기 제작·보급	상반기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 교육정보화과
3-2 반부패·청렴교육 내실화			
3-2-① 반부패·청렴교육 강화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 운영지원과
3-2-② 반부패·청렴교육 참여 확대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
3-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			
3-3-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내실화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3-3-② 부패신고 등 신고시스템 활성화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교육정보화과 디지털소통팀
3-3-③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	연중	운영지원과	반부패청렴담당관
3-3-④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	연중	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	반부패청렴담당관
4. 청렴문화 저변 확산			
4-1 청렴 실천사례 발굴·확산			
4-1-①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등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4-1-② 청렴 파트너 기관 매칭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-
4-1-③ 청렴 실천사례 발굴 공유·전파	연중	반부패청렴담당관	전부서
4-2 청렴활동 홍보 및 대외 소통 강화			
4-2-① 청렴문화운동 홍보 강화	반기	반부패청렴담당관	-
4-2-② 정책고객 DB를 활용한 업무별 맞춤형 홍보	연중	디지털소통팀	반부패청렴담당관
4-2-③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	연중	교육신뢰회복추진팀	전부서